

'미래를 선도하는 으뜸 교육도시, 전주'

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 보육·공교육 강화·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전주시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 속에 전주만의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앞서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강한 경제, 전주'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시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향후 3년간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교육발전특구에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해 저출생과 청년 유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에 나서게 된다.

전주 교육발전특구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이 함께하며, 지역 대학과 기관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된다.

시는 전주 교육발전특구의 모델로 '미래를 선도하는 으뜸 교육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정했으며, '미래 보고 준비하는 교육혁신, 미리 준비되는 지역혁신'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으뜸 늘봄교육(생태미식학교 운영 등) △균형 잡힌 교육환경, 으뜸실(디지털 튜터 등) △K-문화로 세계화를 선도하는, 으뜸인재(K-컬처·K-푸드·K-영화영상 인재양성 등) △국제화 교육의 중심, 으뜸전주(해외문화탐방 등) 등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주 특화 주제 선정을 위한 지역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와 수차례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거쳐왔다. 이후 지난 6월 26일에는 전북대, 전주대 등 지역대학과 지역 산업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전주 시 운영기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교육부에 최종 제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방소멸위기를 맞아 지역이 정책을 고안하고 주도하는 '분권형, 지방주도형' 교육발전특구에 전주시가 선정돼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에 힘을 더하게 됐다"면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정주 여건 개선을 이뤄내고,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KT&G전북본부(본부장 이병태)는 3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를 통해 전주시에 상상펀드 기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자발적 기부 통한 상상펀드 기탁

KT&G전북본부, 소외계층 여름나기 위해 기금 1000만원 후원

KT&G전북본부(본부장 이병태)는 3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를 통해 전주시에 상상펀드 기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탁금은 KT&G 전북본부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형태로 이뤄지며, 국내의 소외계층 지원과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으

로 활용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시민과 함께해주시는 KT&G 전북본부에 감사드리며, 전주시도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전주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KT&G 전북본부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상상univ'를 통하여 지난 2014년부터 김장나눔, 연탄배달, 도시락 배달, 방한용품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욱기 기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추대

"도민 필요한 정책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 앞장" 2년간 지방의회 조직권 독립 등 다양한 활동 기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지역 각 시·군 의회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게 됐다.

30일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주시의회에서 제284차 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협의회장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을 대표해 정부와 연계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조직권 독립과 각종 불합리한 후속 법률 개정,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 역할도 기대된다.

남 회장은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부회장에 박일정 전주시의회 의장,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감사에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을 각각 추대했다. /김욱기 기자



30일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주시의회에서 제284차 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협의회장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추대했다.

전주시 장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10월 운영 예정

화물차의 주택가 밤샘 주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성되는 전주시 장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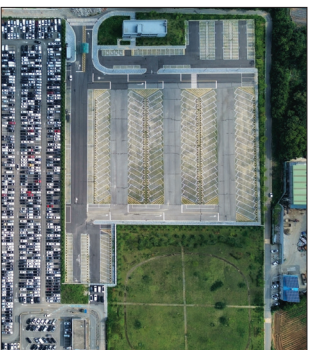
전주시는 최근 열린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장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장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된 후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장동 화물 공영차고지는 시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조성계획 수립 후 201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2017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에 착공했다.

국비 58억6000만 원 등 총 169억 원을 투입해 장동 1054-1번지 일대 4만 1380㎡ 부지에 261면 규모로 조성되는 차고지에는 지상 2층 규모의 관리동 등이 조성됐다.

시는 여기에 화물운송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면실과 샤워장, 체력단련



실, 휴게공간 등 부대시설을 갖춰 조성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또한 시는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구간에 미확보됐던 일부 토지가 최근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추가확보 부지를 포함한 도로포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공영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면 지역 화물차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운송종사자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2차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지를 선정해 공간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홍보

주유소 등 관계인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근거로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 제조소)하는 곳에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해 위험물 관련 화재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금지 △주유소 등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 △위험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박경수 완산소방서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 시설에서는 여름철 폭염 시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며 바다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꽃으로도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히며 "관계인은 물론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